

##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의 개발철학

김 현 돈 \*

### 목 차

1. 성장과 개발, 그리고 발전의 의미
2. 지방화 시대의 개발과 환경문제
3. 21세기 대안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4. 건강한 삶의 철학을 지향하며
5. 글을 마치며

### 1. 성장과 개발, 그리고 발전의 의미

사람이 보다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사람의 삶이 생물학적인 본능에 따라 일차적인 생존 욕구에 얽매어 있을 때, 즉 동물적 상태에 놓여있을 때 이러한 물음은 필요치 않았다. 사람이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이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될 때는 오직 산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는 삶의 질과 가치, 의미를 묻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물음이 인간으로 하여금 동물적 상태에서 벗어나 인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 글은 서귀포시 의회보, 제8호(1999)에 게재된 "21세기 지방정부의 개발철학"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간적 상태로 나아가게 하였다. 여기서 철학적 사유가 시작되었고 문화가 생겨났다. 자연과 인간, 객체와 주체, 물질과 정신이 미분화되어 있었던 신화적 세계관에서 철학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일차적인 욕구의 해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인간의 감각과 의식은 생산력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복잡하게 분화되어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향한 욕망이 문화 속에서 생겨났다. 문제는 삶의 질과 가치와 의미를 어떠한 기준 위에서 보는가 이다. 이것은 물론 개인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른 문제이다.

근대 과학기술혁명은 인간의 욕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고, 경이적인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으나, 이에 따른 극심한 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의 상품생산 체제는 급기야 인간의 가치마저 물질로 계량화시켜, 인간이 만든 상품이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는 인간소의 현상을 낳기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저발전 국가들은 사회발전의 지표를 미국이 주도하는 서구식 근대화 모델에 두었다.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을 부흥시키면 번영과 평화가 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관에는 오늘이 어제보다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인간의 역사가 변화해 나간다는 낙관적이고 목적론적인 시간관이 바탕에 깔려있다.

‘진화(evolution)’는 가치 중립적이고 생물학적인 개념인 데 비해, ‘진보(progress)’나 ‘개발’이나 ‘발전’이니 하는 개념들은 윤리적인 가치판단과 관련된다. 즉 이러한 개념에는 재화의 단순한 양적 증가에 머무르지 않고 균형된 부의 분배를 통한 경제정의의 확립, 청정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생활 환경의 유지, 사회복지 향상 등의 적극적인 가치개념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간의 선천적인 인식능력인 이성에 기초해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할 수 있다는 근대 합리주의의 낙관적인 진보 개념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도구적 합리성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성적 인간(Homo sapiens)은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에게 눈부신 문명의 혜택을 가져왔지만, 술한 전쟁과 분쟁, 파시즘과 나치즘의 대두,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대량학살 등의 반문명적 질병을 드러내어 진보에 대한 인류의 신화를 무색케 했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인류의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고 파멸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원자핵과 자원, 환경의 문제가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을 통한 개발 역시 누가 무엇을 목표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간의 미래가 좌우될 것은 정한 이치이다. 무엇이든 개발만 한다면 인류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맹목적 믿음은 근거 없는 환상에 불과하며 무책임한 개발지상주의의

발로이다.

1972년도에 나온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세계적인 경제성장이 가져올 자원의 고갈과 환경 파괴가 세계 인류와 생명체에 다같이 미칠 영향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현재의 세계 인구, 산업화, 공해, 식량 생산과 자원 소모가 지금까지와 같은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0년 이내에 지구의 성장은 한계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자원은 한정된 것이며 인간의 생산과 소비와 공해의 관리 능력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현재의 성장 경제는 기껏해야 대략 2005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시기가 끝나면 경제적인 쇠퇴는 불가피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경제학자 하일브로너의 말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장에 대한 이러한 우려 속에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는 개발과 환경보전의 상호 관계를 정립하려 노력했다. 그 후 1982년 나이로비 선언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설치를 결정했고 여기서 펴낸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는 개발과 환경보전과의 관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로 정의 내렸다. 그리고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보호는 개발 과정의 한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을 하나의 통합 개념으로 정립하였다.

따라서 이 시대의 윤리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개발’에 그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즉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득을 아울러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모든 관심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국은 개인의 삶의 틀과 국가나 지역사회의 구조와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발전’이나 ‘생태학적 발전’ 개념을 도입해야 할 필요에 직면한다.

## 2. 지방화 시대의 개발과 환경문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내내 개발을 둘러싸고 지방정부와 NGO(비정부조직)간

에 벌어졌던 대립과 갈등을 목격하였다. 메가리조트라는 대규모 종합 관광오락 단지 건설과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제1횡단도로(속칭 5·16도로) 확장 사업이 주된 쟁점이었다. 제주도 지방정부는 IMF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단위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 환경·사회단체들은 개발로 인해 훼손되고 파괴될 환경과 생태계가 지역주민들의 미래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다. 메가리조트 건설은 막대한 외자 유치의 어려움에 빠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은 현재 호주 스카이라일사의 용역 결과가 나와 건설을 추진하려는 도의 방침을 놓고,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서귀포시 토평공업단지 인근 인정교차로에서 수악교를 지나 논고악에 이르는 10킬로미터 구간의 제1횡단도로 4차선 확장 사업은 한때 문화재청의 형상 변경 불허로 제동이 걸렸다가 건교부 제주개발건설사무소에서 재심을 요청, 2.5킬로미터를 제외한 부분 확장으로 결론이 나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자연의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논쟁이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귀결되기 쉬운 이유는, 미래에 대한 예측 불확실성과 눈앞에 보이는 현재 이득의 확실성 사이의 차이에 있다. 즉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환경자원을 보전하기보다 현재의 자원을 개발하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앞의 이득을 위하여 한 번 파괴된 환경은 영원히 재생할 수 없다는 데서 보다 철저하고 신중한 개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부산의 낙동강 하구언이 그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각광받으며 갈대밭의 수려한 자연 자원으로 널리 알려졌던 천연기념물 179호 을숙도의 생태계는 삼각주를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독을 건설하면서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다. 1983년도에 착공되어 1987년 12월에 완공된 하구언은 개발 당시부터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주장하는 개발론자들과 개발로 인한 환경의 파괴를 우려한 보전론자들 사이의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5공 정권의 강력한 개발정책으로 보전론자들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개발 후 보전론자들의 우려대로 인근 사상공단에서 배출된 각종 중금속과 폐수가 하루로 방출되지 못해 고여 썩어감에 따라 을숙도의 자연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어갔고, 급기야 철새의 낙원이던 을숙도는 철새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말았다.

대규모 간척사업의 전형적인 실패로 귀결된 시화호 간척사업과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도 이러한 왜곡된 개발논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건 마찬가지다. 1991년부터 2004년까지 2조 2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에서

가장 긴 32.8km의 방조제를 쌓아 김제시 넓이 만한 4만 100ha의 농지 및 농업 용지를 확보한다는 이 야심찬 사업에 국내 환경단체는 물론 국제환경단체들도 반대 운동에 발벗고 나섰다. 전라북도 갯벌의 90% 이상, 한국 전체 갯벌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곳의 갯벌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습지 중 하나이며, 풍부한 생물종 다양성과 해안보호, 수질 정화 등 무한한 사회·경제적인 환경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이동 통로로 하는 철새들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간척사업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 및 갯벌을 파괴하여 용지 확보로 얻게 될 상업적 가치가 갯벌을 보존했을 때 얻을 환경·생태적 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sup>2)</sup>

자연을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장기간에 걸쳐 현 세대는 물론이고 미래 세대에게도 귀속된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현재 가치(패적인 자연의 보전에 대해 개인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 선택 가치(미래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 그리고 유산 가치(미래 세대가 깨끗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를 포함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추진과 제1횡단도로 확장의 주된 이유로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들고 있으나, 한라산을 자연 상태로 보전해 이용한다면 이 곳은 자연 상태로서의 시장가치, 즉 훼손되지 않은 원생의 자연을 보고 싶어하는 휴양·관광객들에 의한 시장성을 창조하며, 설령 접근성에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패적인 자연의 보전에 대해 개인이 지불할 수 있는 대가로 평가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선택 가치 및 유산 가치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자연상태로서의 시장가치가 상업적 시장가치(개발에 따른 직접적 이윤 창조)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자연상태로서의 보전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상업적 용도로서의 시장가치가 자연상태로서의 시장가치를 능가할지라도 한라산의 자연 자원을 상업적 용도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곳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시장에 의해서 표현되지 않는 무형의 가치, 이를테면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정신적 쾌락과 심미적 욕구 충족 같은 가치가 상업적 가치보다 더 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표현되지 않는 가치가 객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한라산 개발에 관한 궁극적인 판단과 결정은 의사 결정자 각자의 주관적 평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 중앙집권제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환

경정책이 나타나리라 기대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제는 분명히 과거의 중앙집권체제에 비해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는 반면, 이에 못지 않은 부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인 기대 효과로는,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 관련 권한과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환경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획일적인 관료주의를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환경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행정과 정책 과정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민주적인 환경 행정의 기초를 마련될 수 있다는 점,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의사 결집을 통해 지역의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 정책이나 공해 산업의 입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환경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리라고 보는 입장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각종 선거에서 지역 개발과 관련된 선심 공약들이 무분별하게 제시되어 개발지상주의가 지역공동체에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환경 보호보다 지역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고, 공해나 환경 침해에 대한 규제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지방정부간 개발 경쟁을 초래하여 정책 결정자들에게 환경 우선주의보다는 개발 우선주의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각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을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환경 보전보다는 개발에, 분배보다는 성장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간의 상반된 이해 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즉 지방자치제의 과열은 지역이기주의로 지역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환경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수익 증대를 내세워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는 각종 리조트 개발 사업이나 골프장 건설, 내국인 카지노 유치 등에서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짐작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은 지역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다. 참여와 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이 생활 양식 속에 내면화될 때, 환경문제를 밑으로부터 주민 참여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환경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 지역의 환경 문제는 지방자치란 제도의 틀의 도움으로 그 해결이 보다 용이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는 환경 문제를

3) 김상현, "세계화·지방화 시대와 환경문제의 새로운 해법", 박이문 외, 녹색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1998) 195-197쪽.

김병완, "지방자치 시대의 녹색정치와 환경정책", 같은 책, 203-207쪽.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생활자치라는 지자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나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오랫동안 정통성이 없는 군사 정권의 억압적 중앙집권 체제에 순치되어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자각치 못하고, 그 중 일부는 보수적인 지방 토호세력의 정치세력화로 변질되는 듯한 감도 없지 않다.

환경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라는 상호 보완적인 두 요소가 결합된 '환경자치'<sup>4)</sup>는 환경이 갈수록 인간 삶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필연적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현실은 이 양자의 관계가 결코 원만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지자체 이후 거의 모든 지방에서 개발이란 미명 아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었다. 지방 선거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환경을 담보로 한 개발에 관한 것이었으며, 선거 후 각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재정적 곤란을 이유로 각종 개발 사업에 분주하고, 그동안 보류되었던 개발 사업들도 무더기로 재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의 긴장 관계"<sup>5)</sup> 놓여 있음을 증언한다. 지자체 실시 이후 지금까지의 공과를 따져 본다면 우리 지방자치는 친환경적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제주도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개발과 환경문제도 이러한 일반적인 범주에서 결코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지역 개발은 외부 자본에 의존하여 하부구조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편의 증진이란 이름 아래 대규모 주거단지나 시설 지구를 개발하는 성장 위주의 개발이었다. 여기서 개발의 주체는 당연히 중앙정부와 대자본 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된 지역 개발은 지역의 자율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개발 방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반지역적이며 반환경적인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장 위주의 하향적 개발에 대한 대안적 지역발전 모델은 개발의 목표를 성장 중심에서 보전, 분배, 정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개발의 과정에 지방의 창조적인 관리를 허용하며 지방을 경제 개발의 한 단위로 보지 않고 생태적인 삶의 틀이 보장되는 정주 공동체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sup>6)</sup>

이와 같은 지역 발전 방식이 환경자치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선 그간 국가 주도적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복지, 분배, 환경, 참여 등과 같은 발전의 요소들을 발전의 중심 가치로 설정해야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주체적·자율적 관리가 보

4) 조영래, '환경자치'와 대안적 지역발전, 위의 책, 218쪽.

5) 같은 책, 219쪽.

6) 같은 책, 225-226쪽.

장되어 지역 발전의 효과가 지역의 틀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완결되고, 지역의 환경 변수에 대한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지방 주권'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의 기업과 시민조직, 노동자 등 지방의 주체들이 개발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 3. 21세기 대안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오늘날 생태 위기는 전 인류적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일찍이 인간 이성과 과학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에서 비롯된 근대 문명의 역사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총체적인 지구 환경의 오염과 생태계의 파괴는 미구에 인류를 절멸케 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하고 있다. 21세기는 여전히 물질적 성장의 미망에만 사로잡혀 있는 기존의 개발지상주의에 대해 인간 문명과 자연, 성장과 생태계의 공진화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sup>7)</sup>

환경 문제는 근대 이후 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세계관이 낳은 과학기술 문명과 자본주의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 불평등한 국제 관계, 사회·정치 구조 등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선 공해를 방지하고 오염을 줄이는 과학기술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며, 전체적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 우주를 통찰하고 정치와 사회의 구조를 이해하는 철학의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환경(環境)'이란 말은 생물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자연적 조건과 상태를 말한다. 박이문은 환경을 일종의 '조건'으로 보고, 어떤 조건이 "어떤 생명체와의 인과적 관점에서 본 원인/근거일때만 환경의 뜻을 갖는다"<sup>8)</sup>라고 해 환경의 생명중심적 개념을 강조한다. 그런데 근래에 환경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환경만을 지칭하는 제한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의 environment에서 environ이란 단어도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뜻한다. 이 말 자체에서 우리는 이미 환경이란 말의 인간중심적인 의미를 간파한다.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연 훼손 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환경'에 전제된 생명체는 주로 인간을 뜻하고 있다. '환경'이란 말이 인간중심적으로 사용되는 한, 환경의 보존이나 파괴냐는 오직 인간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생태계는 파괴되더라도

7) 전경수, "엔트로피, 부등가교환, 환경주의: 문화와 환경의 공진화론", 계간 과학사상 제3호, (1992, 가을), 85-109쪽 참조.

8) 박이문, "환경·생태계·자연의 올바른 개념과 세계관의 전환", 박이문 외, 앞의 책, 21쪽.

인간을 위한 환경은 보존될 수도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생각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인간의 환경을 다른 생명체들의 환경과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 과 개념상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생태계(ecosystem)' 와 비교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환경과 생태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환경이 인간중심적 개념이라면 생태계는 생물중심적 개념이다. 환경이 삶의 조건/둘러싸움을 뜻한다면, 생태계는 원래 그 어원상 '거주지' 를 뜻하는 그리스어 eco(생태)에서 유래해 삶의 장소로서 거주지의 체계성을 뜻한다. 따라서 환경이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을 중시한다면, 생태계는 '관계' 를 중시하는 생물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환경이 원자론적 세계인식을 반영한다면, 생태계는 유기적 세계인식을 나타낸다. 환경이라는 개념은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는 이원론적 세계관에 토대를 두고 있다면, 생태계는 모든 생명은 뗄 수 없는 상호의존성을 지닌다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sup>9)</sup>

그런 점에서 생태계를 따지지 않고는 환경을 논할 수 없으며, 다른 생물과 독립된 인간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인간중심적 '환경' 의 시각에서 생명 중심의 '생태계' 시각으로 생각의 폭을 넓혀서 환경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한, 환경 문제는 풀기 어렵다. 다시 말해 환경 문제는 인간의 관점에서 근시안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인간-환경-생태계-자연의 맥락으로 점차 거시적인 입장에서 인식할 때 풀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 성장과 생태의 위기는 근대 철학의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방법론에서 비롯되었다. 흔히 데카르트-뉴턴적 세계관이라 일컫는 기계론과 환원주의는 자연을 무수한 부분적 요소로 구성된 거대한 기계의 체계로 보고, 자연을 부분적인 요소로 환원시켜 이해하는 방식이다. 자연과 인간을 이원화시켜 놓고 정신적 주체인 인간이 물질적 객체인 자연을 그 부분 요소로 분할시키고 환원시켜서 이해하려는 발상 속에 곧 인간이 자연의 지배적인 주체로 서려는 인간중심적인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 "분할시키고 지배하라"라는 말이 있듯이 전체를 부분으로 쪼개어 보려는 생각은 곧 쪼개어 지배하려는 저의가 은폐되어 있다. 기계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거대하고 복잡한 자연을 기계처럼 요소 요소로 나누고 환원시켜 과연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자연 현상을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지구촌 저 쪽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 받으며, 첨단 의 유전자 공학을 이용해 생명체를 복제하고, 유전자 정

9) 같은 책, 23-24쪽.

보를 해독하는 게놈 프로젝트로 신의 영역으로 치부되었던 생명의 비밀에 근접하고 있으나, 자동차 배기 가스와 공장 매연을 근원적으로 제어할 수는 없고, 모든 해안으로 파급되고 있는 백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 있는 시스템들인 사회와 생태계는 기계론과 환원주의, 더 나아가 선형적 인과론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생태주의자들은 세계를 분리된 부분들의 집합체로 보기보다는 통합된 전체로 보고 모든 현상들은 근본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과 사회가 자연의 순환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본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은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들의 그물로서 존재한다'고 본다. 세상의 모든 사물과 현상은 보이지 않는 그물로 서로 얽혀 있고, 자연의 모든 사건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제 제도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질서는 일단 자연의 질서를 근간으로 해야 하며, 커다란 자연의 질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안 네스의 심층 생태론의 입장에서 드볼과 세션은 인간을 위한 객체로서의 자연 환경을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모든 자연은 내재적 가치와 생명 중심적 평등을 누린다는 심층 생태주의로<sup>10)</sup>, 스티어링은 주체와 객체, 인간과 자연, 사실과 가치, 윤리와 일상생활을 분리시키는 기계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인 인식론과 가치론에서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생태적이고 전체론적인 인식론과 가치론으로<sup>11)</sup>, 알랜 카터는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경제적 관계에 바탕한 기존 사회 체계에서 자족적이고 평등한 경제적 관계에 바탕한 새로운 사회체계로<sup>12)</sup>, 또 말브레이스는 시장과 경쟁을 강조하고 환경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기존의 지배적 사회에서 공공재와 협동을 강조하고 경제 성장보다 환경을 중시하는 생태주의 사회로<sup>13)</sup>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역설한다.

#### 4. 건강한 삶의 철학을 지향하며

'자연(自然)'은 '스스로 그러함'을 뜻한다. 도가 사상에서 '도(道)'는 무위(無

10) B. Devall & G. Session, *Deep Ecology*, (Peregrine Smith Books, 1985), 69쪽.

11) S. Sterling, "Towards an Ecological World View", J. R. Engel and J. G. Engel(ed). *Ethic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2), 82쪽.

12) A. Carter, "Towards a Green Political Theory", in Dobson and Lucardic(1993), 39-62쪽.

13) L. Milbrath,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 119쪽.

爲)할 뿐 아니라 자연하다(無爲自然). 무위의 본래 뜻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비활동'이 아니라 '자연에 반하는 행위, 사물의 결(理)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자는 "무위에 의해 모든 것을 이룬다(無爲而無不爲)"고 했다. 이와 같이 '무위자연'에는 동양의 친환경적 생태주의 사상이 집약되어 있다. 서양의 기계주의에 대해 예로부터 동양의 사상은 자연을 역동적인 유기체로 보는 유기체주의였고 생태중심적이었다. 도의 관점에서 사물들을 본성에 따라 그 자체로 보고 이해하며, 사물을 단편적으로 쪼개어 보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았다.

이런 건강한 자연관은 서구 사상이 유입되어 모든 생활과 가치 체계를 지배하면서 희석되거나 망각되었다. 개발과 성장이 국가 발전의 지표로 부상되었다. '우리도 한 번 잘살아 보세'라는 경제 개발의 구호 속에 외형적 성장은 본질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희생시켰다. 군사 정권의 개발독재에 의해 인권도 철저히 무시되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는 권위주의로 일관해 온 중앙집권체제의 맹목적 개발주의를 청산하고 주민 참여와 자치의 틀 속에서 내포적 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몰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은 선거 과정에서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개발 공약을 남발하는가 하면, 차기 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며 개발 사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도 이런 저런 지역 이해관계에 얽혀 그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치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혈연과 지연 같은 연고주의에 지배되기 쉬운 제주도와 같은 중소 도시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다.

밖을 나가보자. 도시는 도시대로 시골은 시골대로 가는 곳마다 굴삭기와 불도저 등 각종 중장비로 깎이고 파헤쳐져 한 곳도 성한 곳이 없고,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다. 수많은 삼림을 훼손하고 자연을 파괴하면서 중산간에 20개가 넘는 골프장을 건설해야, 모든 중산간·도로를 고속도로 같이 4차선, 6차선 직선도로로 개설하고 확장해야, 다른 도시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도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사행성 오락산업을 꼭 유치해야 지역 발전이 되는지 우리는 궁금하다. 여기서 우리는 환경정의의 문제가 제기돼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환경문제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환경정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도 크다.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득과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생기는 손해 사이의 비대칭이 개발과 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환경의 보전과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과 손해가 분배적 정의의 측면에서 제대로 할당된다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컨대 골프장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회원권을 팔아 큰 이윤을 남기겠지만, 환경과 관련해서 볼 때 우리는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대가는 불특정 다수의 몫으로 돌아온다. 즉 환경 파괴와 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공동체 전체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것은 환경을 훼손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자들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또는 피해 당사자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환경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환경 파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당사자에게 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직접 '생태세(eco-tax)'<sup>14)</sup>로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공동체 전체의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또한 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여 생기는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 역시 보전을 통해 혜택을 누리는 공동체 전체가 보상해야 마땅하다.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전체의 이득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선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이해득실을 환경정의의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5. 글을 마치며

무엇보다도 지방정부는 2000년대를 대비해 개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전향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은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공동체 속의 인간'이다. 경제적 인간은 이기적 욕망에 포로가 된 인간이며, 그러한 인간이 모여 사는 경쟁 사회 속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살려는 공동체의 삶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회발전의 지표를 경제적 인 성장에 치중하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의 복지를 골고루 섬기는 체제, '정의롭고,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체제에 두어야 한다. 그러한 사회가 인간의 생존과 환경·생태의 보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사회이다.

둘째, 환경 가치와 개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와 환경과 문화를 분리시켜서 보지 않는 전체적 사고, 특히 지금까지 이원적으로 인식되었던 환경과 경제 논리의 일원적 통합이 필요하다. 인간의 이기적 욕

14) '생태세'의 개념은 프리츠프 카프라,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사,1998), 393 쪽 참조.

망에 기초한 경제 논리와 이타적 관심과 배려에 기초한 환경의 논리, 삶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경제 논리와 삶의 질적 고양을 목표로 하는 환경 논리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개발의 중심을 생태환경에 두고 생태환경과 통합되는 환경친화적인 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개발의 이익은 지역 주민의 후생·문화 복지 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 성장, 분배, 환경의 가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발전 전략을 꾀해야 한다.

자연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득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동체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개발, 경제적 부가가치에만 연연하지 않고, 문화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진정한 개발은, 양적인 팽창은 물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안정성의 향상과 나아가 양으로 표현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때 ‘환경의 질’은 ‘삶의 질’을 정의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sup>15)</sup> 또 관광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의 생태·문화적 독자성을 되살려 생태와 문화와 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문화 관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밑으로부터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해 지역의 환경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환경민주주의가 확립되고, 환경 문제 해결과 지방자치가 갈등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되는 환경자치가 정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분별한 개발 논의를 막기 위해선,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생기는 이해 득실을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동시에 보장되도록 조정하는 환경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넷째, 인간의 편협된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적 환경론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를 관계의 그물로 파악하는 생물중심적 생태계로 시각을 넓혀야 한다. 또 인간에 의해 대상화된 인간중심의 자연관으로부터 자연의 내재적 가치와 생명가치의 호혜적 평등을 강조하며, 환경·생태계의 위기를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기대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향으로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나가는, 심층 생태학으로 확장된 환경의식은 인간의 거주 공간에 대한 조화로운 질서와 균형을 추구하는 확장된 심미의식과 연관된다. 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삶의 환경과 심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는 공공미술을 실천하여 도시공간을 재조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엇

15) 정희성, “21세기 환경 정책 및 행정의 발전 방향”, 계간 환경과 생명, (1998, 여름), 22쪽.

이 참된 지역 발전에 이르는 길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오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지역 개발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로 지방정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우리에게 펼쳐질 21세기가 장미빛 유토피아가 될지 절망의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환경과 삶의 질을 성찰하는 건강한 철학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달려 있다. 또한 이러한 철학을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역 발전 정책으로 구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상현, “세계화 · 지방화 시대와 환경문제의 새로운 해법”, 박이문 외, 녹색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1998)
- 김병완, “지방자치 시대의 녹색정치와 환경정책”, 박이문 외, 녹색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1998)
- 조명래, “‘환경자치’와 대안적 지역발전”, 박이문 외, 녹색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1998)
- 전경수, “엔트로피, 부등가교환, 환경주의: 문화와 환경의 공진화론”, 계간 과학사상 제3호, (1992, 가을)
- 박이문, “환경 · 생태계 · 자연의 올바른 개념과 세계관의 전환”, 박이문 외, 녹색한국의 구상, (숲과 나무, 1998)
- 정희성, “21세기 환경 정책 및 행정의 발전 방향”, 계간 환경과 생명, (1998, 여름)
- 프리츠프 카프라, 김용정, 김동광 옮김, 생명의 그물, (범양사, 1989)
- 문화일보, 2000년 7월 19일자
- R. Heilbroner, *An Inquiry into the Human Prospect: Updated and Reconsidered for 1980s*, (New York : Norton, 1980)
- B. Devall & G. Session, *Deep Ecology*, (Peregrine Smith Books, 1985)
- S. Sterling, “Towards an Ecological World View”, J. R. Engel and J. G. Engel(ed). *Ethics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92)
- A. Carter, “Towards a Green Political Theory”, in Dobson and Lucardic(1993)
- L. Milbrath, *Envisioning A Sustainable Socie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89)